지난해 전남 관광객 32% 여수·목포·순천 방문

무안·나주·담양 관광객 수 대비 숙박시설 부족
영암·영광·완도·해남은 음식점 너무 많아

道·KT 전남관광 빅데이터 분석

지난해 전남 관광객의 32%가 여수·목포·순천을 둘러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안·나주·담양의 경우 방문한 관광객 수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한 반면, 영광·완도·구례는 지나치게 많은 '과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영광·완도·해남 등은 관광객 수 대비 음식점 수도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제 1의 관광지인 여수를 찾는 여행객들은 전반적으로 50대가 많지만 성수기에는 20대 여행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KT는 최근 3년 간 전남 지역 관광지에 대한 소셜미디어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남여행'에 대한 언급은 5월과 8월, 10월에 가장 많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을 활용, 전남 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신안·목포·여수·담양·영광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 현황과 소셜트렌드, 소비자 성향을 분석했다. 특히 최근 1년 간 지역별 빅 데이터 분석 결과는 주요 관광지를 찾은 여행객들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여수의 경우 지난해 방문객 중 50대가 16%로 가장 많았고 40대(15.2%), 30대(13.8%), 20대(15.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성수기인 8월에는 여수를 찾은 관광객 245만8000명 중 20대(23%)가 가장 많았다.

목포는 여름철 이외 관광객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목포를 찾은 여행객은 7월 188만7000명, 8월 202만6000명, 9월 216만7000명으로 급등세를 보이다가 10월 187만3000명, 11월 176만4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순천은 순천만정원, 갈대밭 등으로 인해 5월(204만3000명), 9월(222만7000명)에 찾는 여행객들이 많았다. 나주의 경우 찾았다가 빠져나가는 여행객들의 49%가 광주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 데이터 분석 결과, 전남을 찾은 여행객들은 흥미거리가 부족하고 지역 정보를 통합해 검색하기 어렵다는 점, KTX 외 인접 관광지로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행객들이 많았다. KT는 이같은 점을 감안,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지 컨텐츠의 질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1개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제안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관광지 통합안내 지능형 콜센터 ▲전남도내 시·군 및 관광지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검색·예약 서비스와 이동·체험용 전기차 공유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남 관광형 MaaS(Mobility as a Service)시스템 ▲전남 내 연계 관광 활성화를 꼽았고 우선 추진할 과제로 ▲지역민들만 아는 현지의 숨겨진 정보를 공유·추천받을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관광 큐레이션 ▲신안지역 주요 섬을 연결한 보물선 어드벤처 AR 투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맛집을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세이프티 환경 조성 ▲관광 성수기에 여수지역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그린 존 운영 ▲담양 죽녹원 야간 개장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확대 등 6개를 선정했다. 장기 과제로는 ▲QR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영광 SMART 해안도로 구축 등을 선정해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관광객 6000만명 조기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대기업 민관 합동조사

시민단체 등 참여
여수산단 환경 감시

전남지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축소한 대기업 등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시작된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거짓 기록 관련, 유관기관 합동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민·시민단체·지방의회·학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꾸려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첫 회의를 다음 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또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위반 배출사업장의 굴뚝 70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조사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기업들과 자율개선협약을 맺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가 자동으로 파악되는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대상도 확대해 57개 업체(164개 굴뚝)에서, 오는 2021년까지 244개 업체(1173개 굴뚝)로 늘리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여수산단 주변 대기실태 조사와 주민 유해성 건강 영향평가도 실시하는 한편, 전남도 특별 환경지도감시단을 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측정 대행업무를 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수산단 악취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동 측정 차량·고정식 측정기·종합상황실·상시악취측정시스템 등을 국비 35억원과 지방비 35억원 민자 50억원을 들여 마련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안건 23건 처리

광주시의회(의장 김동찬)는 지난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19년도 광주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 등 예산안 2건,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광주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단'이 이날 시의회 앞에서 발대식을 했다. 홍보단은 3개조로 이뤄졌으며, 5월 한 달간 전국 15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대회준비상황 알리기, 입장권 단체구매 요청 등의 수영대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시의회 '수영대회 홍보단' 발대식 광주 시의원들로 구성된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홍보단이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구의원 "조례안 조사하라" 공무원에 공문 말썽

구의원 발의 일부 조례안 타 지역 제정 조례안과 유사

광주시 남구의회 한 구의원이 "다른 지자체에는 있지만 남구에는 없는 조례안을 조사해 달라"고 공무원에게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구의원이 발의한 일부 조례안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안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30일 "남구의회 A의원이 공무원에게 조례안 조사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과 남구청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타 자치구(특별시·광역시)에 있으나 우리 구에는 없는 조례 및 미제정 사유'라는 제목의 공문을 구청에 발송했고, 이에 남구청은 실·과에 이를 전달했다. 남구청 각 실·과는 56건을 취합해 A의원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조례 발의 연구와 조사를 본인이 하지 않고 공무원을 동원했다면 품위유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공무원을 통해 받은 뒤 그대로 복사해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A의원이 최근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평택시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안이다. 지역서점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서점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등의 주요 내용도 일치한다.

기초의원의 일을 떠안은 공무원의 반발도 일고 있다. 남구청 안영석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한 차례 이와 관련 항의를 했었다"면서 "지방의원이 법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자신의 일을 공무원에게 떠넘긴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다른 지역 조례안을 비교해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 지방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무원을 통해 자신의 자치구에 없는 조례안을 조사한 적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조례안을 조사는 과정에서도 '업무가 많은 실과는 빼라'고 협의했었고, 일부 실과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에 필요한 조례안 제정을 먼저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정가

김용집 시의원 발의 '학생도박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회 김용집 시의원(민주·남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5년 마다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도박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또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면 성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예방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제도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재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체제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